

노르딕 국가들의 유럽통합 참여와 노르딕 정체성 : ‘유럽화’와 이중적 통합*

김 인 춘**

EU 회원국인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시민들의 태도의 특징은 노르딕 협력 및 통합에 대한 강한 지지와 유럽연합(EU) 잔류 선호라는 이중적 인식이다. 노르딕 지역의 실용적 통합과 EU의 초국가적 통합이라는 이중적 통합을 수용하면서 이를 개별 국가와 지역적 발전에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 중심의 초국가적 유럽통합과 지역적 연대의 노르딕 통합 모두 각각의 이익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EU의 유럽정책에 대한 유럽이사회(EU Council)와 유럽의회의 의결에서 네덜란드와 함께 영국과 가장 유사한 투표행위를 해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EU의 경쟁적 통합양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스웨덴과 덴마크는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중시하지만 중소국인 이들은 유럽통합의 이점을 잘 알기에 잔류 여론도 높아 이중적·실용적 통합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유로 단일통화를 채택한 핀란드는 유로존 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친EU 노선과 핀란드 정체성을 양립시켜오고 있다. 사실상 준회원국인 노르웨이 또한 EU의 단일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노르딕 지역은 성공적인 금융위기 극복, 복지개혁, 노동시장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7472).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개혁 등 리스본 전략인 '유럽화'에 가장 성공한 지역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브렉시트의 영국과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EU의 정책과 전략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라는 점에서 이중적 통합과 이중적 정체성의 중심이라 할 것이다.

주제어: 유럽통합, EU, 노르딕 정체성, '노르딕 블록', '유럽화', 실용적 통합, 이중적 통합

1. 들어가며 - '유럽화'와 노르딕 정체성

유럽통합은 유럽 각 국가의 특수한 정체성(identity)보다 유럽 공통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럽연합(이하 EU)으로 대표되는 '보다 큰 (정치)공동체', '더 큰 우리'의 '우리의식'의 확대와 심화가 그것이다(김학노, 2018; 김미경, 2018). 유럽통합이 각국 또는 각 지역 간 '주체성'을 대등하게 중시하면서 통합을 이루어왔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유럽통합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하여 국민국가를 넘는 유럽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 초국적 정치공동체의 형성을 추구해 왔다. 이러한 유럽통합 프로젝트가 정당성의 위기 또는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증거는 적지 않다. 민주주의 결핍, 외국인 혐오, 포퓰리즘 확산,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분리주의 등이 그것이다(배병인 2018; 강병익 2018). 그 결과 EU 개혁 노력과 별도로 반(反)EU 포퓰리즘과 함께 여러 회원국에서 EU(또는 유로존) 탈퇴 주장이 등장해 왔다.

그러나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후 3년 동안 이어져온 영국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역설적으로 다른 회원국들에게 EU 탈퇴의 가능성을 일정 정도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5월 23-26일 실시된 EU 의회 선거 결과는 반이민·반EU의 민족주의적 우파 포퓰리즘 세력의 힘을 증명했지만 동시에 EU와 유럽통합에의 지지 또한 매우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이

번 선거의 투표율(50.97%)이 직전 선거(2014년) 투표율(42.6%)을 크게 넘어 20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그만큼 유럽통합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극우정당이 선전했지만 예측과 달리 유럽 전체적으로 극우세력은 2014년 지지율을 크게 넘지 못했다. 물론 3개 극우계열그룹이 22.8%의 지지율을 얻어 중도우파그룹 24.0%, 중도좌파그룹 19.4%, 자유민주당그룹 14.5%인 상황에서 포퓰리즘의 강한 영향력과 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EU를 지지하는 전통적인 중도우파의 유럽국민당그룹(EPP)과 중도좌파의 사회당그룹(S&D)의 후퇴에도 유럽통합 강화를 주장하는 새로운 중도의 자유민주당그룹(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ADLE)의 세력 확대로 EU의 약화나 유럽통합의 위축이 바로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¹⁾ 이는 1980년대 이후 유럽통합의 심화, 즉 ‘유럽화’가 시장통합 등 여러 영역에서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원국, 즉 개별 국가 또는 지역에 미치는 EU의 영향 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르딕 지역은 냉전시기에 유럽통합 프로젝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비록 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가 나토(NATO) 창립 회원국이고, 덴마크가 1973년 (영국, 아일랜드와 함께) EC에 가입했지만 노르딕 정체성은 서유럽 정치협력체라 할 수 있는 유럽통합 프로젝트와는 거리를 두게 만들었다. 스칸디나비아 3국(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의 스칸디나비아주의(Scandinavianism)라는 문화언어적 동질성 뿐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사회모델, 평화·중립주의, 노르딕 지역협력(북유럽협의회, the Nordic Council),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등으로 구성된 노르딕 정체성이

1)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https://www.election-results.eu/> 참고. 포퓰리즘 정당 관련하여

<https://www.politico.eu/article/populist-tide-rises-but-no-flood-eu-elections-2019/> 참고.

유럽의회는 8개의 정당그룹(party groups)으로 나뉘는데 유럽국민당그룹, 사회당그룹, 중도의 자유민주당그룹, 녹색당그룹, 통합좌파및노르딕녹색좌파그룹(GUE-NGL), 그리고 3개의 극우계열 그룹이 있다.

<http://www.europarl.europa.eu/about-parliament/en/organisation-and-rules/organisation/political-groups> 참고.

견고했기 때문이다. 나토가 결성될 때까지 노르웨이와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중립을 표방했고, 나토 이후에도 스웨덴·핀란드의 중립주의는 냉전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함께 유럽통합이 심화되고 1980년대 말 이후 탈냉전의 상황에서 노르딕 지역은 경제적, 이념적으로 유럽대륙과 매우 가까워졌다. 탈냉전으로 중립주의의 의의는 크게 약화되었고, EU의 시장통합은 ‘국가 경쟁력’을 위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북유럽 강국인 스웨덴의 집권 사회민주당이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도입하고 양 방향의 해외 자본이동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아이슬란드의 금융허브 추진,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등 모든 노르딕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전략과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유럽화’를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되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4년 국민투표를 통해 EU 가입을 공식화하고 1995년 1월부터 오스트리아와 함께 EU 회원국이 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함께 중립노선으로 군사적 중립을 견지해 온 스웨덴과 핀란드의 EU 가입에는 탈냉전과 유럽통합의 심화라는 외부적 환경 뿐 아니라, 1991-93년 스웨덴과 핀란드의 심각한 경제위기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복지개혁과 시장개혁, EU 가입 등이 이루어지면서 노르딕 사회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약화, 북유럽 중립 정체성의 소멸 등 노르딕 정체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사회민주당 등 북유럽 국가들의 중도좌파정당은 1990년대 이후 선거정치에서 크게 후퇴해 왔다.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지출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복지도 축소되어 왔다. 물론 노르딕 정체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도 강하다. 많은 여론조사에 의하면 보편적 고복지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고, 핀란드의 경우 나토가입 찬성은 20% 전후, 반대는 5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서현수, 2018) 복지와 중립은 이들의 삶에서 ‘실재(reality)’로써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의 규범을 모두 수용하고 분담금도 내고 있는 실질적인 준회원국이다(Sverdrup, 1998). 물론 공식 회원국이 아니므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 회원국으로서 유럽 차원의 공통 법제에 자국 법규를 적응시켜왔다. 아이슬란드도 1994년부터 EEA 회원국이 되어 EU 단일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 사실 노르웨이는 EU(EC) 가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비록 모두 부결되었지만 덴마크가 가입하던 당시인 1972년 뿐 아니라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하던 당시인 1994년에도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노르딕 정체성(identity)은 무엇보다 언어·문화, 역사종교적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정체성은 중세시대부터 비롯되었지만 19세기만 보더라도 나폴레옹 전쟁 후 ‘100년의 평화’(폴라니, 1944) 시기에 지리적으로 유럽대륙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노르딕 지역은 스웨덴·노르웨이 연합왕국(1814-1905년), 스칸디나비아주의²⁾, 경제협력과 스칸디나비아³국 통화동맹 등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노르웨이의 분리·독립(1905년), 핀란드의 분리·독립과 내전(1917-18년), 1·2차 세계대전 시기 스웨덴의 중립, 1939년 핀·소전쟁, 2차 대전 중 독일의 덴마크·노르웨이 점령 등으로 노르딕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각각 서로 분리되었다. 20세기 전반기에 분리되어 있던 노르딕 국가들은 국가주권의 안정과 함께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면서 새로운 협력과 통합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 후 노르딕 국가들은 협력과 ‘실용적 통합’을 이루면서 지역적 평화와 번영, 사회적 평등과 연대의 ‘노르딕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김인춘, 2016a; 김인춘·석주희, 2017). 노르딕 지역은(노르딕 5개국) 북유럽협의회(the Nordic Council, 1952년 창립)라는 실용적인 작은 지역통합을 성공적으로 지속하면서 유럽통합 과정에도 일정 부분 참여해왔다. 이들 5국은 EEC(EU 전신) 가입 전에는 모두 유

2) 스칸디나비아주의는 중세시대부터 역사적으로, 언어·문화적으로 형성되었고 16세기 이후 개신교의 수용으로 종교적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스웨덴 헤게모니 하의 ‘정치적’ 스칸디나비아주의가 스웨덴에 대한 이웃국가들의 견제, 덴마크-프로이센 전쟁 당시 스웨덴의 전략적(이중적) 입장 등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스칸디나비아주의는 바로 소멸되었다. 19세기 후반 들어 스웨덴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노르딕 지역의 경제발전과 경제협력에 기반한 ‘경제적’ 스칸디나비아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김인춘, 2016a).

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이었고 현재 모두 EEA 회원국이고³⁾ 쉥겐조약⁴⁾ 가입국이다. 노르딕 5개국 중 3개국(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이 나토 회원국이나 스웨덴과 핀란드는 군사적 비동맹 노선을 고수하면서 참여하지 않고 있다. 초국적 유럽통합 기구인 EU에는 3국만 참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공식적으로는 EU 미가입국이다. 화폐통합(유로존)에는 핀란드만 참여하고 있다. 유럽통합 측면에서 볼 때 핀란드가 가장 적극적이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가장 소극적이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중간수준이라 할 것이다. 쉥겐조약에 가입한 덴마크와 스웨덴은 유럽의 금융시장 자유화에는 동의하면서도 화폐통합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실용적 통합’ 또는 ‘유연한 통합(flexible integration)’(Rosamond, 2016; 866)이라 할 것이다. 노르딕 국가들은 비정치·비안보의 여타 모든 사항에 협력하는 매우 성공적인 사회·경제·문화 협력체인 북유럽협의회를 통해 ‘실용적 통합’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북유럽 국민들은 국가주권이 최대한 보존되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체인 북유럽협의회와 화폐주권을 포함하여 국가주권이 상당 정도 양도되는 EU를 비교할 수 있었다.

현재의 위기와 달리 유럽통합 주체들이 처음부터 지향해온 이상과 가치, 즉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과 사회적 연대는 사실 노르딕 정체성이었다. 따라서 노르딕 지역이 EU(EC)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것은 노르딕 지역만의 그 무엇, 즉 유럽대륙으로부터 지정학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평화와 중립주의 등 스스로 만든 지역 정체성 때문이었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와 탈냉전, 유럽통합이 심화되면서 노르딕 지역은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으며 내부적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결과 1995년 스웨덴과 핀란드가 EU에 가입하게 되었다. 노르딕 지역이 유럽 지역에

3) EEA는 유럽의 양대 무역블록인 EU와 EFTA이 합쳐진 거대한 유럽 단일시장으로 199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현재 EEA에는 EU 28개국 등 총 33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 EFTA에 가입되어 있는 4개국(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모두 EU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 중 스위스는 EEA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4) 현재 쉥겐 가입국은 26개국이다. EU 28개국 중 영국, 아일랜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키프로스, 크로아티아는 미가입국이고,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은 쉥겐 가입국이다.

통합되고 EU라는 ‘경계’ 안에 들어가면서 작은 노르딕 ‘지역’은 큰 유럽 ‘지역’의 한 부분이 되었다. 따라서 노르딕 ‘지역’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노르딕 정체성과 EU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본 논문의 질문은 노르딕 국민들은 EU 및 노르딕 통합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주된 특징과 성격,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이에 대한 가설적 답은 ‘EU통합강화노르딕협력약화’, ‘EU통합약화노르딕협력강화’, ‘EU통합강화노르딕협력강화’, ‘EU통합약화노르딕협력약화’이 될 것이다. 여기서 ‘EU통합’은 노르딕 국민들의 EU에 대한 지지와 자국의 EU로의 통합 지지를 의미한다. 연구 결과는 ‘EU통합강화노르딕협력강화’로, 실용적인 노르딕 지역통합이 초국가성을 지향하는 유럽통합이라는 큰 경계 안에 대등하게 포함되는 이중적 통합(dual integration)임을 보여준다.

2. 2차 세계대전 후 노르딕 지역의 민주적 통합과 유럽

노르딕 국가들은 오랫동안 ‘꺼리는 유럽인(reeluctant Europeans)’(Miljan, 1977), ‘다른 유럽공동체(the other European Community)’(Turner and Nordquist, 1982), ‘어색한 파트너(awkward partners)’(Stegmann McCallion and Brianson, 2018) 등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만큼 노르딕 지역은 오랫동안 고유의 정체성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의해 유럽과 구별되어 왔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유럽통합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두기보다 스스로 다른 대안을 모색해 왔다. 1952년 북유럽협의회는 물론 1970년까지 노르딕 관세동맹(Nordic customs union) 구축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르딕 국가들 중 덴마크가 1973년 첫 EC 회원국이 되었지만 유럽통합정책의 예외조항을 적용받았다. 최근에도 노르딕 국가들은 EU 차원의 방위동맹보다 노르딕 지역 차원의 방위동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정도의

5) 2017년에 이루어진 노르딕 국가들의 유럽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차이는 있지만 노르딕 국가들은 EU 차원의 군사동맹, 통화동맹, 정치적 통합에 매우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그만큼 국가주권을 우선하면서 노르딕 지역 협력과 정체성을 중시해 왔다.

노르딕 지역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노르딕 지역협력은 역사적, 지정학적 조건으로 난관이 적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전반기의 불안하고 불안정했던 노르딕 지역의 지정학적 구조를 재편하는 역할을 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1939년 9월 3일 2차 공동 중립노선을 선언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중 노르딕 국가들은 중립(스웨덴), 전쟁(핀란드), 점령(덴마크, 노르웨이)의 서로 다른 상황에 처했고, 전후에는 친서방중립(스웨덴), 친소중립(핀란드)⁶⁾, 1949년 결성된 NATO 동맹(덴마크, 노르웨이, 1944년 덴마크로부터 독립한 아이슬란드)의 각자 독자적인 대외노선으로 ‘노르딕 밸런스(Nordic balance)’를 가져왔다. 1948년 5월 스웨덴은 지정학적 국가블록과 같은 북유럽 중립 안보 동맹을 제안했으나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북유럽 국가들은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에 기반한 상호 신뢰와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는 지역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김인춘 석주희, 2017).

2차 세계대전 후 북유럽은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의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1952년 덴마크와 스웨덴 주도로 발족한 북유럽협의회(Nordiska rådet, The Nordic Council)다.⁷⁾ 당시 약소국이었던 핀란드(1956년 가입)는 소련의 반대로 바로 참여하지 못했고, 노르웨이는 경제적 약자로 종속적 위치에 대한 불안으로 소극적이었으나 서유럽 통합의 분위기 속에서 북유럽 상호간 협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1953년 참여하게 되었다. 북유럽협의회는 강력한 통합보다 각국의 주

<https://www.votewatch.eu/blog/which-role-for-the-nordic-countries-in-the-europe-of-tomorrow/>

6) 핀란드의 친소중립에 대해서는 서현수(2018) 참조

7) 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인 1914년 12월 스웨덴 말피에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대외정책에서의 공동노선과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위한 결의가 북유럽협의회 회의 기원이다.

권과 주체성을 존중하고 이해관계가 크게 상치되지 않는 방향에서 협력을 추구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만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실용적 통합'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김인춘, 2014; 변광수, 2006). 노르딕 지역은 비군사비정치의 경제·사회·문화 협력체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통합을 추구'하고 있다.⁸⁾ 역사적 공통성이 이러한 북유럽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민주주의의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노르딕 지역은 1971년 북유럽각료회의(Nordic Council of Ministers)의 창설 등 1970년대까지 지역적 협력과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평화시대', '노르딕 모델' 등 큰 성과를 이루면서 유럽과 일정한 거리를 두어왔다.

2차 대전 후 노르딕 지역은 대외적으로 두 개의 큰 경제권의 영향을 차례로 받았는데(Baldwin, 1992; Gron, 2015) 영국과 독일이 그것이다. 전후 영국은 노르딕 국가들의 주요 수출시장이었고 그에 따라 유럽통합에 대한 정책도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 영국과 노르딕 간 상호 의존은 매우 높았고 1970년대까지 유럽통합에 대한 노르딕 국가들의 입장에 영국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1951년 파리조약(즉,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이후 영국의 고립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이 잘 알려져 있듯이, 영국은 오랫동안 유럽대륙의 통합 프로젝트에 소극적이었다. 독일 또한 중요한 영향을 주었는데 1970년대 이후 독일경제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노르딕 국가들은 독일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특히, 1990년 독일통일 후 독일과의 상호관계 및 의존은 독일주도 유럽통합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Barnes, 1996). 그 결과 EC는 노르딕 국가들에게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고 EC 관세동맹(그 후 공동시장)은 모든 노르딕 국가들에게 핵심적인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 시기에 노르딕 5국 간 정치적, 경제적 상호의존 또한 높아졌는데 1959년 스톡홀름회의(Stockholm Convention) 후 영국 주도의 EFTA(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7국)가 1960년 설립되면서 노르딕 국가들 간 무역은 물론 공동여권과 공동의 노르딕 노동시장으로 자유이동과 무역의 장벽이 사라져 노르딕 국가들 간 높은 상호의존이 이루어졌다(Nedergaard, 2009).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1960년 EFTA에 가입했다(아이슬란드 1970년 가입).

8) 북유럽협의회 홈페이지 <https://www.norden.org/en> 참고

1951년 출범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 등 그 후의 유럽통합 프로젝트는 정치적인 성격과 이념적 비전을 가졌다. 유럽대륙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담보할 ECSC는 194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와 유럽회의(Congress of Europe), 1949년의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이어진 일련의 유럽통합 노력의 제도적 결정판이었다(장문석, 2008: 315).⁹⁾ 북유럽국가들은 20세기 전반부를 휩쓸었던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었고,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도 아니었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오랜 기간 노르웨이를 지배했지만 전쟁을 통해 식민지를 쟁취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노르웨이는 자치권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민족주의와 전쟁으로 붕괴하던 유럽의 국가들은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유럽통합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EFTA는 처음부터 순수한 경제적 프로젝트였다(Urwin, 1995). 그리하여 중립국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창립회원이 될 수 있었고 핀란드는 소련의 우려로 인해 1986년에 가입했다. EFTA 회원국들은 영국과 같이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회의적이었던 나라들에게 대안이 되었다. 1961년 영국과 함께 덴마크가 처음으로 EC 가입을 신청하고 1962년 노르웨이가도 신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되었고, 1967년 이 세 나라 모두 다시 신청했으나 또 다시 거부되면서 이 시기에 여러 정책 분야에서 노르딕 협력이 가속화되었다. 공동노동시장, 무역권 국경통과 등 매우 실용적인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다(Laursen, 1998; Strang, 2016). 비록 성공적이지는 못했지만 덴마크는 1968년 경제협력체인 NORDØK (Nordic economic cooperation regime) 설립을 제안하면서 노르딕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9) 유럽통합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1951년 ECSC 창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 발족으로 자유무역지대 구축, 1967년 유럽공동체(EC) 출범과 관세동맹 완성, 1993년 EC가 EU로 전환되면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이 출범했다. 1999년 EU 단일화폐인 유로가 출범했다. EU는 개별 국가와 유사한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원회, 유럽중앙은행 등을 통해 초국가적인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승인권을 갖는 유럽의회, 법안 발의권을 갖는 EU 집행위원회 뿐 아니라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 회원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대 들어 유럽의 상황이 급변하면서 노르딕 협력과 통합은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 EC가 새로운 회원국 영입에 나서면서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영국과 함께 가입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1973년 가입했고, 노르웨이는 국민투표 부결로 가입하지 못했다. 1972년, 1994년 모두 부결된 노르웨이의 EU 가입 국민투표는 노르웨이의 어업 및 농업 문제 뿐 아니라, 내부의 지리적·사회적 요인이 중요했는데 중앙-주변 차원이 그것으로 친EU파는 남부와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으로 고소득자, 고학력자, 남성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가결된 1994년의 핀란드 및 스웨덴의 EU 가입 국민투표에서도 유사했다(Jenssen et al., 1998; Tamnes, 1997).

유럽은 유럽대로, 노르딕은 노르딕대로 각각 지역적 통합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노르딕과 유럽 간 경제적 상호의존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에 이 두 지역을 가깝게 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노르딕과 유럽의 통합을 시도하려는 것이다(Miles, 2015). 이와 동시에 1970년대 들어 노르딕 예외주의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유럽통합에 대한 노르딕 국가들의 논란('Nordic debates')은 심화되었다. 노르딕 지역을 대륙과 구별하는, 즉 '노르딕은 더 좋다(Nordic and Nordic branding is better)'(Lawler, 1997; Browning, 2007)라는 인식과 주장이 그것이다. 유럽과의 밀접한 관계 또는 유럽에의 통합은 노르딕 국가들 고유의 복지자본주의, 관대한 복지제도, 완전한 민주주의, 평화중립주의 등 노르딕 정체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주장이다(Hilson, 2008; Miles, 1995, 1996).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자본주의와 특유의 노르딕 국제주의(평화, 분쟁해결, 중재 등)라는 국가주권과 노르딕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노르딕 정부와 정치엘리트들은 유럽대륙과의 상호의존은 잘 관리되어야 하며 밀접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왔다. 이 점에서 자유무역의 보장은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노르딕 5국은 개방된 수출중심 경제로 그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EU와의 국제무역은 복지자본주의와 관대한 복지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경제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19세기 노르딕 지역의 자유무역과 시장경쟁은 노르딕 사회의 자유주의 및 사회적 연대 가치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Grøn et al., 2015;

Schouenborg, 2013). 유럽단일시장(SEM), 유럽경제지역(EEA), 유럽단일통화체제의 구축에 따라 노르딕과 유럽과의 상호의존 심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정치엘리트들과 수출기업가들은 이러한 상호의존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유럽통합에 대한 노르딕의 태도는 EU와의 상호의존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갈수록 증척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 상호의존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즉 EU 가입의 필요성을 의식해 온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온 전통에 따라 노르딕 국가들이 유럽통합 문제에 접근할 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이다. 노르딕 국가들이 모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EFTA(1960년), EEA(1993년)와 같은 큰 틀을 중시한 것도 이러한 결과였다. 이는 노르딕 국가들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3. 스웨덴·핀란드의 EU 가입과 ‘노르딕 블록’

3.1. 1980년대 유럽통합 심화와 노르딕 모델의 변화

북유럽 국가들은 평화와 협력,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적 연대와 평등의 정체성을 자랑해왔다. 이는 20세기 중반 이후 중도좌파 정당의 우세 속에 사회민주주의적 경제·사회정책, 사회적 타협, 정치적 합의로 나타났고 ‘노르딕 모델’ 또는 ‘강소국 모델’로 회자되어 왔다. 이러한 강한 노르딕 정체성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오랜 기간 유럽통합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정학적으로 유럽대륙과 거리가 있었고, 더구나 스웨덴과 핀란드는 대외적으로 중립노선을 표방해 왔기 때문에 냉전시기 공산주의 동유럽에 대항한 서유럽연합으로 인식되어 온 유럽통합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유럽통합의 제도적 토대였던 ECSC는 각국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보다 당면한 정치적 필요에 의해 탄생했는데 독일과 이탈리아는 파시즘의 전력과 패전국의 낙인을 씻고 국제적 인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했다. 프랑스로서는 철과 석탄의 생산을 공동관리 하에 두어 평화보장과 경제번영의 추구 뿐 아니라 유럽통합

의 이상을 실현한다는 슈망플랜으로 독일산업을 국제적 감시체제 하에 두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베네룩스 3국은 모두 서로 인접한 소국으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웠고 전쟁의 피해가 컸으며 이미 1944년에 베네룩스 관세동맹조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또한 ECSC는 민족주의를 봉쇄하려는 이념적 필요에 의해 탄생하였다. 민족적 이해관계와 유럽적 이해관계 모두를 위해 국가주권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유럽통합의 주인공들이 공유한 기독교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적 배경은 친유럽적이고 반공산주의적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유럽통합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뜨거운 민족주의도, 강한 기독교민주주의도 없었다.

그러다 198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유럽통합이 심화되고 탈냉전이라는 매우 놀라운 환경변화가 나타났다. 탈냉전은 나토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EU에의 가입을 꺼려왔던 스웨덴, 핀란드 등 중립국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Ekengren and Sundelius, 1998; Jenssen et al., 1998). 노르딕 국가들은 1980년대 말부터 EU와의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는데 1980년대 유럽의 경제 침체, EFTA 국가 기업들의 EU 수출의 어려움, 탈냉전이 주요 요인이었다. EU(당시 EC) 가입은 노르딕 자본세력의 오랜 요구사항이기도 했다. 1980년대 중반 유럽 단일시장이 만들어지면서 볼보 등 노르딕의 글로벌 기업들은 수출이 어려워지자 해외 투자를 확대했고 이는 모국의 경제를 어렵게 했다. 이에 EFTA 국가들은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도 EU와의 관계 구축을 시작하게 되었다. 핀란드는 냉전시기였던 1980년대에 EU 회원국이 되어 진정한 서구국가가 되고 싶어했으나 소련과의 관계로 인해 실현될 수 없었다(Raunio & Tiilikainen, 2003; Stubb, 1996). 탈냉전과 함께 1991년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발생한 심각한 경제위기는 유럽통합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1992년, 스웨덴은 1991년, 오스트리아는 1989년 각각 EU 가입 신청했고 바로 EU가 동의했는데 이는 부유한 EFTA 국가들이 EU 예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표 1> 노르딕5개국과 유럽 관계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EU	o (1973)	o (1995)	o (1995)	x	x
Eurozone	x	x	o (1999)	x	x
EEA	o	o	o	o	o
헝겔	o	o	o	o	o
NATO	o	x	x	o	o

스웨덴과 핀란드의 EU 가입은 곧바로 진행되고 1994년 완료되었지만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쉽지 않았다. 덴마크는 1972년 국민투표에서 63.4%의 찬성으로 1973년 가입했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통합의 심화에는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 결과 외교안보정책, 사법 및 내무 영역, 향후 경제 및 통화통합 등 통합 심화를 구체화한 마스트리히트조약 비준을 위한 1992년 덴마크 국민투표는 51% 반대로 부결되었다. 1993년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덴마크는 통화동맹, 공동안보정책, 유럽시민권 제도화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을 부여받았고 그 결과 2차 국민투표에서 57%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비준되었다. 탈냉전으로 핀란드는 서구블록과 가능한 한 많은 강한 연계(ties)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더구나 1990년대 초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은 핀란드와 스웨덴은 EU의 새로운 단일시장이 경제회복의 돌파구이자 대안으로 등장했다. 첫 단계로 EC와 EFTA가 1992년 EEA에 합의했고 그 결과 EFTA 국가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EU 내부시장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스웨덴과 핀란드는 EC 가입을 신청했고 정치적, 경제적 주변화를 우려한 노르웨이도 뒤이어 신청했다. 1994년 3월 가입협상이 마무리되었고 이 세 나라는 1994년에 국민투표를 하게 되었다. 핀란드는 56.9%의 찬성으로, 스웨덴은 52.3%의 찬성으로 가입이 확정되었지만 노르웨이는 47.7%의 찬성으로 부결되었다.

핀란드는 유로존에도 가입하여 유럽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 EU 회원국이 되면서 EU 밖의 두 나라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EU와의 관계를 공식화 하고자 했다. EEA 합의가 1994년 1월 발

효되면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EEA 회원국은 EU 준회원국으로 연계되어 EU 단일시장 일원이 되었으며 농·임업은 제외되었으나 많은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해졌다. 노르딕 5국 모두 경찰, 국경통제협력에 대한 Schengen agreement 가입했으며, 노르웨이는 EU와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에 대해서도 협력하게 되었다(Claes and Fossum, 2002). 이러한 노르웨이를 ‘차별화된 통합 또는 차별화된 회원국(differentiated integration or EU membership)’으로 보기도 한다(Stubb, 1996; Egeberg and Trondal, 1999). 사실상 노르딕 5국 모두 EU에 참여하게 되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노르딕 지역은 EU 경계 내에 완전히 들어오게 되었고 특히 경제적으로 상호의존과 통합이 심화되었다.

3.2. EU 경계 내 ‘노르딕 블록’ - 이중적 통합의 가능성

1990년대 중반부터 노르딕 국가들이 사실상 모두 EU에 참여하면서 ‘노르딕 블록(Nordic bloc)’의 정체성과 실재(reality)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1993-94년 EU가입 협상 당시 핵심 논쟁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노선을 포기할 것인가, 덴마크가 EU의 통합심화 노선을 수용할 것인가, 노르웨이가 1972년 EC가입 국민투표 부결을 뒤집을 것인가 등이었다. 이는 노르딕 정체성과 국가주권의 문제였다(Hansen and Waever, 2003). 노르웨이는 또 다시 가입을 거부했고, 덴마크는 통합 심화를 거부했으며, 스웨덴과 핀란드는 중립을 포기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유로화를 도입한 핀란드만이 유럽통합에 완전히 동참했다. 그 결과 노르딕 지역은 유럽통합 관련하여 ‘보다 분화된(towards more differentiation)’(Egeberg, 2003)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노르웨이는 회원은 아니지만 EU의 ‘유럽화’(Europeanization without membership)를 추진했다. 그렇다면 EU와의 관계에서 노르딕 블록은 약화 또는 와해되었는가?

1990년대 이후 EU의 정책 결정에 노르딕 국가들의 영향력, EU가 노르딕 국가들의 정치, 제도, 정책 등에 미친 영향, EU의 여러 정책영역에서 노르딕 국가들간 유사성과 차별성을 보면 ‘노르딕 블록’의 실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U와 회원국간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회원국의 주권을 증시

하는 정부간주의, 초국가성 관점, 조직론 관점 등이 있다(구춘권, 2016; 김남국, 2011; Moravcsik, 1998). 영국은 EU 회원국임에도 ‘어색함(awkwardness)’의 특징을 보여 왔고 결국 2016년 브렉시트로 귀결되었다. 노르딕 국가들 또한 오랫동안 유럽통합에 소극적이고 회의적이었으며, 회원국이 된 이후에도 ‘어색함’을 보여왔다(McCallion and Brianson, 2017). 노르딕 지역은 여전히 ‘타자적’ 유럽공동체(the ‘other’ European Community)(Grøn et. al., 2015)이기도 하면서 EU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노르딕 국가들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있었지만(Esmark, 2001: 127; Gudmundsen, 2002; Larsen, 2001: 184) 회원국 간에 차이가 있었다. 덴마크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스웨덴은 투명성, 환경, 고용 등의 문제에서 영향력을 보였다(Miles, 2000; Johansson, 2002). 노르딕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가입했으나 가장 회의적인 덴마크(Jacobsson et al., 2001; von Dosenrode, 1998)는 통합 심화를 반대해왔다. 1990년대 EU의 전성기에 가입한 핀란드와 스웨덴은 외교노선 등에서 큰 변화를 경험해왔고 시장제도 등 ‘유럽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왔다(Lægread, 2001; Miles, 2000).

1980년대 중반 이후 EU의 통합양식은 기존의 보조적 통합양식에서 경쟁적 통합양식으로 변화해왔다. 경쟁적 통합양식은 역내시장의 확대와 통합, 구조개혁, 연구기술 분야의 현대화 등을 중시하고, 정책적으로 자유화와 통화주의, 광범위한 개방과 제도적 유연화를 추구하며, EU 차원에서 탈국가화를 지향해왔다(구춘권, 2018). 문제는 통합양식의 불균등 발전과 비대칭성이었다. 경제적 영역은 단일시장 등으로 완전한 개방과 초국적 축적체제를 이루었으나 사회적 영역, 특히 재분배와 관련해서는 상징적인 의미 이상이 부여되지 않았다. 법적, 규제적 성격을 갖는 시장통합과 달리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을 가졌을 뿐이다. 그 결과 회원국들 간 경제적 격차가 커져왔고 회원국 내 사회적 격차도 확대되어 왔다. 스웨덴은 경쟁적 통합양식에 따라 개방과 경쟁, 유연화에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일정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스웨덴의 성공적인 유럽화와 탈규제로 인해 복지축소와 임금격차가 나타나면서 재분배, 노사관계 등 과거 스웨덴 모델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웠다. 라발

(Laval) 사례¹⁰⁾는 EU 법에 따라 스웨덴 내 외국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건은 스웨덴 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EU 법원의 판결을 가져왔다(신광영, 2017). 자본과 노동의 이동을 국내적 차원에서 규제하기 어려워지면서 스웨덴 노동관계 모델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유사한 배경 하에서 EU에 가입했지만 스웨덴은 과거 덴마크와 유사하게 단일시장 등 보다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고려했다면, 핀란드는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정치·안보적 측면의 이익을 기대했다. 유로존에 창립국으로 가입하는 등 핀란드의 적극적인 유럽통합에의 참여 노력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핀란드의 정치·안보적 이익이라는 기대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크지 않았고 적극적인 통합 노력은 유로존 위기 이후 핀란드의 심화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귀결되었다.¹¹⁾ 향후 핀란드가 독일과 프랑스가 추구하는 ‘더 심화된 유럽통합’에 얼마나 동참할지는 이러한 경제 및 안보문제의 해결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로존 위기 이후, 특히 난민사태 이후 유럽통합 위기가 고조될 때 노르딕 국가들은 EU 회원국이지만 여전히 ‘다른 유럽공동체’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는 유럽의 정책결정에서 노르딕 국가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블록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 등 EU의 정책과 보조를 맞추면서 노르딕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노르딕 국가들은 여전히 ‘다른 유럽공동체’라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유로존의 핀란드, 여러 예외조항을 갖는 덴마크 등 EU와 서로 다른 역할과 관계로 인해 노르딕 국가들 간 결속이 약화될 수도 있지만 유럽의 정책결정에서 노르딕

10) 2004-2009년 라트비아 건설업체 라발의 스웨덴 현지 법인과 라트비아 출신 근로자에 대한 라발과 스웨덴 건설노조 간 노동쟁의 및 소송 사건이다. 라발관련 EU 차원 판결로 라트비아 출신의 임시파견노동자는 스웨덴 건설노조의 단체교섭에 적용되지 않고 스웨덴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이 가능해졌다.

11) 특히, 고실업이 가장 큰 문제로 핀란드의 총선은 실업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 2017-18년 2년 동안 실시된 핀란드의 기본소득실험은 실업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었다. 2019년 4월 14일 실시된 핀란드 총선의 결과도 실업과 복지문제가 쟁점이었고,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정당인 핀란드인당의 선전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유럽통합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응집력 있는 블록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국제적 문제나 유럽 문제에서 노르딕 국가들의 입장은 전통적으로 유럽과는 다르고 유럽보다 더 낫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노르딕 국가들이 공유한 많은 요소들, 특히 오랜 민주주의 전통,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력, 프로테스탄트 전통, 보편적 복지국가와 높은 투명성 등에 의해 만들어졌다.

EU 지지와 노르딕 블록이라는 이중적 통합 성격을 가져온 요인은 다양하다. 유럽단일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실용적 고려, 평화안보 등 대외 국제관계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EU 질서의 현실적 장점과 필요(특히 핀란드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혼돈스러운 상황이 제공한 반면교사 역할(브렉시트의 역설), 북유럽 국가들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들로 인해 현재의 실용적 통합 및 협력 이상의 심화된 통합체제 구축의 어려움, 북유럽 국가들 내 우파포퐁리즘 정치세력들의 실질적 역량과 영향력의 한계 등을 꼽을 수 있다. EU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심화된 노르딕 통합을 추구하지도 않는, 그러나 EU, 노르딕 모두에서 실용적 차원의 이중적 통합을 지속하고 있는 노르딕 국가들의 모습은 또 하나의 노르딕 정체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노르딕 국가들 간의 차이는 분명하며 그 차이는 향후 EU와 개별 노르딕 국가 간은 물론, 노르딕 국가들 간의 협력에도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3. 덴마크·스웨덴의 실용적 참여, 핀란드의 정치적 참여

1973년 영국, 아일랜드와 함께 유럽통합(당시 EEC)에 참여한 덴마크는 영국과의 긴밀한 관계와 함께 자국의 경제사회적 문제와 이에 따른 정치적 문제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노르딕 국가 중 가장 먼저 유럽통합에 참여한 덴마크는 북유럽 5개국 중 이민자 및 난민이 가장 먼저 대량 유입되면서 반이민·반다문화 극우정당(덴마크국민당, Dansk Folkeparti, DF, 1995년 창당) 또한 일찍부터 득세했다. 국민당은 이민자 추방을 주장하고, EU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며, 유로화 도입과 터키의 EU 가입을 반대해 왔다. 국민당은 높은 지지로 1998년 첫 총선에서 7.4% 지지를 얻고 지속적으로 의석수를 늘려

왔으며, 2015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에 이어 제2당이 되었으며, 2001년부터 현재까지(2011-15년 제외) 여당으로 정부에 참여하고 있다.¹²⁾ 덴마크는 1973년 이후 지금까지 영국과 매우 유사하게 소극적이고 실용적인 통합 입장을 보여왔다(Von Dosemrode, 1998). 다수의 국민이 교역 등 경제적 이점을 들어 EU를 지지하기 때문에 현재 우파 연합정부와 의회, 여론은 친EU가 강한 편이다. 다만 일부 우파정치인과 주로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인 반대 입장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이민 및 난민 문제, EU 집행위의 관료주의와 방만한 재정에 대한 반감 등에 기인하고 있다. 1973년 EEC 가입 당시에는 분담금에 비해 EU로부터 받는 각종 지원규모가 더 컸지만 지금은 수혜금보다 분담금 규모가 커진 것도 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덴마크는 EU 통합과 관련해 1992년, 1993년, 2015년에 국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는데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인준을 위한 국민투표가 근소한 표차로 부결되어 예외조항을 적용받은 후 실시된 1993년 국민투표가 가결되어 EU 회원국으로 잔류할 수 있었다. 당시 덴마크는 영국과 유사하게 몇 가지 조건을 보장받았는데 EU 시민권 미획득, 자국화폐 사용, 공동방위 반대가 그것으로 덴마크는 아직까지도 EU 통합의 예외 권한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2015년 12월 덴마크는 유로폴(유럽경찰기구) 잔류 여부 국민투표에서 반대 53%로 탈퇴를 선택했는데 이는 새로운 유럽통합 심화에 반대한 것이었다. 덴마크는 비교적 초기에 가입한 국가로 오랜 기간 유럽통합 과정에 참여해왔지만 그 참여의 정도는 깊지 않았으며 자신의 주권과 정책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이득이 되는 방향에서 협력해 왔다. 이민 및 난민 유입이 많았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초국적 수준으로 이전했던 국경통제와 난민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개별국가에 되돌려야 한다는 대중적 요구가 증대하면서 EU와 이민·난민정책 협상에서도 자국 입장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66%라는 매우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2019 덴마크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이민의 유럽회의주의 정당인 덴마크국민당(DF)은 10.76%의 지지율을 얻어 2014년에 얻은 26.6%에서 크게 폭락했다.¹³⁾ 23.50%를 얻은 중도우파의 자유

12) 2019년 6월 5일 실시된 덴마크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중도 좌파연합이 승리했다. 국민당은 기존 37석에서 16석으로 크게 패했다.

당(2014년 16.7%), 21.48%를 얻은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2014년 19.1%)이 선전하면서 보다 유연한 EU관련 정책이 예상된다.

스웨덴은 유럽통합에 대해 ‘회의주의에서 실용적 지지(from scepticism to pragmatic support)’로 바뀐 사례이다(Michalski, 2013). 1995년 EU에 가입한 스웨덴은 오랜 외교적 중립노선과 고유의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로 국가주권과 사회·경제정책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유럽통합에 소극적이었다. 1980년대까지 EEC와 EC는 냉전시기 서유럽의 지역통합 기구였고, 기독교민주주의 계열의 정당과 초국적 대자본이 지배하는 EC는 역사적으로 중립외교와 계급타협체제를 중시해온 스웨덴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았다. 따라서 스웨덴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유럽통합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1980년대 들어 유럽 시장통합의 심화와 1990년대 초 스웨덴의 금융위기는 유럽통합에의 참여를 촉진했는데, 1990-92년의 금융위기는 스웨덴으로 하여금 EU 가입 외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렵게 만들었고(Miles, 1994)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환경 변화는 EU 가입을 용이하게 했다.

세계화의 심화로 스웨덴의 수출대기업은 1980년대 초부터 자본의 해외이전과 함께 EC 가입을 주장해왔다. 유럽통합에 대한 사회민주당 일각의 선호는 이미 1980년대부터 나타났는데 1980년대 사회민주당 정부는 자본시장을 개방했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일정 정도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1970년대 들어 세계적 경기 침체와 함께 스웨덴 모델이 한계에 이르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스웨덴 모델을 쇠신하고 새로운 경제 활력을 위해 채택한 것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자본시장 탈규제로 1990년 금융위기를 맞게 된 스웨덴은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보다 적극적인 시장개혁을 위해 EU 가입을 고려하게 되었다. 사회민주당 정부의 칼손(Ingvar Carlsson) 총리가 1990년 10월 EU 가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르딕 정체성 또는 스웨덴 정체성에 큰 충격을 주었다. 관례와 달리 이웃 노르딕 국가들과 협의 없이 발표된 스웨덴의 결정은 노르딕 국가들, 특히 스웨덴과 함께 중립노선을 견지해온 핀란드에게 충격이었다. 그만큼 스웨덴의 결정은 시급했고 전격적이었다.

13) <https://election-results.eu/national-results/denmark/2014-2019/constitutive-session/>

탈냉전으로 유럽에서 EU의 위상이 높아지고 EU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초국가적 기구가 되면서 노르딕 국가들은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스웨덴에 이어 핀란드와 노르웨이 또한 곧바로 EU 가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위기와 함께 스웨덴 수출대기업의 강력한 압력과 경제논리는 EU가 너무나 신자유주의적이고 따라서 노르딕 복지자본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보는 사회민주당 정부의 오랜 반대 입장을 바꾸게 만들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 가입은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결과라기보다 사회세력 간 투쟁의 결과이며, 국가-사회관계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의 지속과 심화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Bieler, 2002). EU 가입에서 경제적 요인 또는 자본의 입장이 중요했던 스웨덴으로서는 자본이동과 시장개혁(경쟁정책, 기업지배구조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¹⁴⁾ 가입 후 정치사회적으로 침묵하던 스웨덴은 2000년대 들어 EU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용적 지지(pragmatic support)’를 표명했다. 스웨덴은 회원국이지만 유로체제에 가입하지 않았고 유럽통합에 회의적인 여론으로 인해 외부 참관자적인 ‘문제적(problematic)’ 회원국으로 평가받았지만 2001년 전반 유럽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것을 정점으로 유럽통합 문제에서 초국적 방안을 수용하게 되었다(Miles, 2001).

실용적인 통합 입장을 보여 온 덴마크와 스웨덴은 브렉시트 전까지 EU에 대해 영국과 유사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들은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부국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EU를 바라보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전략적 중립노선을 취해온 스웨덴은 탈냉전이라는 환경변화로 EU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1980년대 들어 좌우파를 막론하고 시장친화적 엘리트와 자본세력의 EU 가입 요구가 매우 강했다. 가입 후 스웨덴은 EU 역내에서 상품수출은 물론 자본수출까지 늘렸고 EU의 경쟁정책을 통한 시장개혁으로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별 문제없이 지금까지 안정된 성

14) 스웨덴은 발틱국가들에 적극적으로 자본 수출을 해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스웨덴 은행권의 거액의 대출 익스포져(exposure)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장과 낮은 실업률 등 매우 양호한 경제성과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 EU 집행위원회는 스웨덴 정부에 2021-2027년 기간 EU 예산 분담금을 매년 추가로 15 billion 크로나를 요청했다. 이는 2014-2020년의 예산 분담금에 비해 35%가 증가하는 것으로 스웨덴 정부는 이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¹⁵⁾ 이미 많은 분담금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2015년 난민 위기 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수용하여 EU에 충분히 기여했음을 강조했다. 스웨덴은 2013년 당시 라인펠트(Fredrik Reinfeldt) 총리가 영국과 함께 처음으로 EU 예산을 줄이는데 성공한 바 있다. 영국이 없는 상황에서 EU 예산 삭감을 위한 스웨덴의 유일한 동맹은 소국들인 덴마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으로 이들은 ‘북부동맹’을 결성하여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¹⁶⁾ EU 집행위원회는 브렉시트로 인한 예산 손실과 국경통제, 난민, 국방, 치안 등 새로운 업무로 인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웨덴은 사법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폴란드, 헝가리 등 권위주의적 회원국들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를 주장하지만 이들 나라는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있다.

1990년 10월 스웨덴 사회민주당 정부의 EU 가입 계획 발표는 스웨덴과 함께 중립노선을 견지해온 핀란드에게 큰 충격이었다. 탈냉전과 소련의 해체로 정치적 충격과 함께 경제위기에 빠진 핀란드는 1992년 3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상을 시작했다. 탈냉전으로 정치적으로나 안보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핀란드는 EU와의 견고한 관계를 위해 유로존에도 가입했다. EU 가입 후 핀란드는 유로존 회원국으로 경제와 단일시장, 무역에 관심이 컸지만 EU의 대외정책, 즉, 스웨덴(군사강국) 및 덴마크(나토회원국)와 달리, EU가 비나토회원국인 핀란드의 안보와 공동안보정책을 보장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1980년대 들어 유럽통합의 심화, 스웨덴·덴마크의 신자유주의적 경제노선, 1989년 동구 공산주의권의 해체와 탈냉전, 소련의 해체로 인한 핀란드의 경제적 충격 등으로 핀란드는 새로운 국가전략이 시급

15) <https://www.thelocal.se/20180502/swedish-finance-minister-attacks-unreasonable-eu-budget> 참고

16) 북부동맹에 대해서는 <https://www.dutchnews.nl/news/2018/03/dutch-join-eight-country-group-to-warn-brussels-on-eu-powers-economic-stability/> 참고

했다. 1990년대 초 경제위기에서 곧바로 회복한 핀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까지 고성장을 이루었다. 노르딕 국가 중 유일한 유로존 국가인 핀란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을 직접 받았고, 유로존 위기로 고실업, 마이너스성장 등 장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김인춘, 2016b). 또한 EU의 가장 예민한 문제인 공동안보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이 군사적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비나토(non-NATO)의 중립 노선이지만 강력한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웨덴과 달리 핀란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안보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유럽통합의 위기와 노르딕 국가들의 선택 - 경제위기, 민주주의, 포퓰리즘

4.1. 경제위기, 브렉시트, 유럽통합의 위기

2009년 유로존 위기,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2015년 이민·난민 위기로 EU의 핵심 목표와 제도들은 위기에 처했다. 경제통합에 가장 성공한 EU였지만 유로존의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자 대내외적으로 EU의 정치적 힘도 약화되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2009년 유로존 위기가 시작된 후 위기극복과 EU 개혁은 경제 강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에 의해 주도되었다. 최근에는 2017년 5월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강한 유럽’ 건설을 위한 EU 개혁안을 제시하며 유럽통합 심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¹⁷⁾ EU 개혁을 통한 유럽통합의 심화를 위해서는 프랑스와 독일과의 협력

17) 2017년 9월 26일 소르본 대학 연설에서 유럽재건을 위한 "주권, 결속 및 민주적인 유럽을 위한 이니셔티브"(Initiative pour l'Europe "Une Europe souveraine, unie, démocratique")를 제안했다. 현재의 유럽은 "너무 약하고, 너무 느리고,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혁을 통해 EU 회원국이 국방과 난민·이민, 금융안정 등의 문제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과 유로존의 공동예산과 유로존재무장관 창설을 강조했다.

이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유럽방위통합, 은행연합(Banking Union), 유럽통화기금(EMF) 설립, 유로존 공동투자기금 마련 등을 제안하면서 유럽통합 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과 주도 하에 EU 재정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상호연대를 강화한다고 하여 EU 개혁, 더 나아가 유럽통합의 심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유럽 전체적으로 반(反)유럽통합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와 EU 내 반EU 정권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EU엘리트기득권을 거부하고 강대국 중심의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

EU는 재정통제 등 더 강한 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지만 그리스의 반발을 시작으로 브렉시트, 중부유럽 회원국들의 노골적인 반EU 노선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및 난민 부담을 안고 있는 ‘작지만 강한’ 국가들이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EU 개혁에 적극 개입하고자 2018년 3월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를 중심으로 한 ‘북부동맹(North Alliance)’을 결성해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EU가 처해 있는 위기의 본질이 유로존 위기 등 심각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EU가 추구하는 ‘더 긴밀한 통합(an ever closer union)’의 반작용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 긴밀한 통합은 회원국들의 주권을 제한하고 비용분담을 늘림으로써 반EU 정서와 극우세력의 부상을 돕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통합비용보다 통합이득을 누리거나 기대해 온 상황에서 더 커진 경제적 비용과 정치적 부담을 분담시키고 이를 제도화하려는 EU의 다양한 시도와 노력은 적지 않은 반발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¹⁸⁾

‘북부동맹’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의 발트 3국, 유로존인 네덜란드, 핀란드, 아일랜드, 유로 미가입국인 스웨덴과 덴마크 등 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¹⁹⁾ 이들은 모두 재정이 건진하고, 경제적 경쟁력과 민주주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재정규율 등 EU 규칙의 준수를 강조한다. 북부동맹은 벨

18)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과 주장이 있으며 그 하나는 회원국의 국민들이 아직까지 ‘유럽시민’이라는 연대감과 정체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김남국, 2011).

19) <https://www.dutchnews.nl/news/2018/03/dutch-join-eight-country-group-to-warn-brussels-on-eu-powers-economic-stability/>

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몰타 등 다른 4개 소국과도 연대하고 있다. EU 개혁과 통합 심화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이들 북부의 강소국들은 공동의 성명을 발표하고²⁰⁾ 마크롱 대통령의 EU개혁 구상을 비판하면서 마크롱과 메르켈의 강한 통합론에 대항하는 '조용한 반란자(North's quiet rebel)'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²¹⁾ 북부동맹은 EU의 첫 번째 약속, 즉 주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국가 단독으로 대응하기 힘든 문제에 정책 공조하는 장으로서의 EU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단일시장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EU의 경제적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분열된 EU에서 EU 집행위원장 등 새로운 지도부와 예산 등에서 이들 국가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그동안 네덜란드는 스웨덴, 덴마크와 함께 EU 정책에서 영국과 보조를 맞추어 왔다는 점에서 '북부동맹'은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대안이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북부동맹은 현재 EU 예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U가 다시 예산을 늘리고자 하면서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중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15개 나라를 제외한 12개 회원국(북부동맹 8개국+연대 4개국)이 분담금 증액에 반대하고 있다. EU가 국방

20)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자체의 '공동예산'을 만들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은 EMU 개혁안을 발표했다.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고 EU 내 남북(South-North) 경제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개혁안의 명분이었다. 북부동맹 8개국 재무장관들은 EMU 개혁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개혁안은 회원국 재정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 주권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했다.

<https://www.dutchnews.nl/wpcms/wp-content/uploads/2018/03/PositionEMUDenmarkEstoniaFinlandIrelandLatviaLithuaniatheNetherlandsandSweden.pdf>

21) https://www.politico.eu/article/mark-rutte-quiet-rebel-of-the-north-eu-netherlands/amp/?__twitter_impression=true 북부동맹에 대한 정치평론가들의 관심은 북부동맹을 'the Hanseatic League 2.0', 'the Gang of Eight', 'Mark Rutte and the Seven Dwarves'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와 인접한 발트 3국과 북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해 러시아산 가스 송유관을 서유럽으로 직접 연결하는 사업인 노드스트림2 사업을 반대하지만 이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는 침묵하고 있다.

과 난민 문제, 치안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영국의 탈퇴로 인해 최대 150억 유로의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분담금 증액에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EU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이들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²²⁾ EU 집행위원회는 국방과 난민, 치안 분야의 예산지출 확대를 위해 농업기금이나 가난한 지역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농업기금 감축에 대해선 프랑스 등이, 가난한 지역 지출 감소에 대해선 동유럽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헝가리, 폴란드 등에서 반EU의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4.2. 포퓰리즘과 유럽통합 - 노르딕 국가들의 선택

유럽에서 포퓰리즘 정당의 득세는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김종범, 2018; 정병기, 2018),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에서 뿐 아니라 (Bunce, McFaul and Stoner-Weiss, 2009) 북유럽국가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U 28개 회원국에서 2018년 현재 핀란드를 포함하여 16개국에서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거나 연정에 참여하고 있다. 헝가리, 폴란드 등 중부유럽의 일부 EU 회원국들에서는 사법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권위주의적인 비자유주의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이는 EU의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권력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EU 내, 특히 스웨덴 등 북유럽의 민주국가들과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당은 자기이익만 챙기는 엘리트 기득권층과 무임승차자인 난민·이민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논리로 대중 최우선주의를 내세운다(Bermann, 2016; Turley, 2018). 또한 브렉시트 국민투표와 같이 일반시민의 목소리가 곧바로 반영되는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고 국가와 민족을 중시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의 위기와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

22) EU는 현재 7년 단위로 편성한 1조 유로(1천300조 원 상당) 규모의 예산안을 오는 2020년까지 거의 소진하게 되며 2021-27년간 집행할 예산안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EU 회원국 GDP의 1% 수준인 EU 예산규모를 1.1~1.2%로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가 가져온 부정적 결과들, 즉 사회적 불평등 심화, 이주민 증가와 반이민 정서, 자국 정체성 약화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정치적으로 배타적이고 적대적으로 선동, 동원한 것으로 본다. 이는 민주주의 규범을 쇠퇴시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Levitsky and Ziblatt, 2018; Snyder, 2018). 비록 권위주의적이거나 인종주의적이지는 않지만 북유럽 국가들에서 반이민 또는 민족주의적 극우정당의 제도권 진입과 세력 확대는 EU의 개방성과 자유주의 가치는 물론 자신들의 포용과 민주주의 가치에도 위협이 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09년 유로존 재정위기 발생 이후 EU 국가들에서 유권자들의 포퓰리즘 지지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이러한 유럽의 포퓰리즘 정당들이 2019년 5월 23-26일 실시된 유럽의회 선거에서 크게 약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2014년 지지율보다 크게 높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들의 상당한 지지율을 볼 때, 현재의 EU와 유럽통합 과정을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과 주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가 포함된 '북부동맹'의 역할이 요구된다.

노르딕 국가들에서도 반이민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극)우파정당의 득세는 이미 2015년 덴마크 총선(국민당, 제2당), 2015년 핀란드 총선(핀란드인당, 제2당), 2017년 노르웨이 총선(진보당 FrP, 제3당)에서 나타났다(Widfeldt, 2015). 2019년 4월 14일 치러진 핀란드 총선에서 반이민 극우정당인 핀란드인당은 1석 차이로 제2당이 되었다. 노르웨이 진보당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우파연정에 참여하고 있다.²³⁾ 반이민의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Sweden Democrats, SD)이 2018년 9월 9일 총선(투표율 87.1%, 총 349석)에서 17.53%(62석)를 득표하여 2014년 총선(12.9% 득표, 49석)부터 차지해 온 제3당의 자리를 더욱 공고화했다. 좌파블록 144석, 우파블록 143석인 상황에서 사임을 거부한 현직총리(사회민주당 소속)가 2018년 9월 25일 의회에서 불

23) 노르웨이 진보당(The Progressive Party, Framstegspartiet, FrP)은 1989년부터 지금까지 1993년 총선을 제외하고 제 2, 제 3당을 차지해왔다. 진보당은 스스로 자유주의, 민족주의 정당으로 포퓰리즘 정당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반이민의 자국우선주의를 주장한다는 면에서 우파 포퓰리즘 정당으로 보고 있다(Widfeldt, 2015).

신임투표에 의해 퇴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결과를 만든 SD 당수는 선거 기간 중 강력한 반이민정책을 주장하고 EU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한 부패집단’이라 비판하면서 EU 탈퇴, 즉 ‘Swexit’ 국민투표를 주장하기도 했다.²⁴⁾ EU 관련하여 가장 소극적인 덴마크를 제외한 스웨덴과 핀란드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표 3>, <표 4>와 같다. 2014년, 2019년 스웨덴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극우당인 SD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의석은 2014년 7석에서 2019년 6석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의 경우 극우당인 핀란드인당의 지지율은 약간 높아졌지만 2019년 4월 핀란드 총선 지지율 17.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의석은 2014, 2019년 모두 3석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모두 EU에 대한 지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EU 회원국 전체의 투표 결과와 유사하게 극우당의 의미있는 득표에도 녹색당의 선전과 견고한 EU 지지를 보여준다.

<표 2> 노르딕 국가들의 극우정당

국가	극우정당	지지율 및 현황
덴마크	덴마크 국민당 (DF)	2015.6.총선 21% 득표 (제2당)
스웨덴	스웨덴 민주당 (SD)	2014.9.총선 12.86% 득표 (제3당) 2018.9 총선 17.53% (제3당)
핀란드	핀란드인당 (Finns)	2015.4.총선 17.7% 득표 (제2당), 우파연정 참여 2019.4 총선 17.5% 득표 (제2당)
노르웨이	노르웨이 진보당 (FrP)	2017.9.총선 15.2% 득표 (제3당) 2013년부터 우파연정 참여 중

24) 국민투표를 제안하기 위해서는 의원 1/3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중도좌파 및 중도우파 의원 대부분은 친EU이다. 스웨덴민주당은 2019년 들어 Swexit 공약을 취소했다.

<표 3> 스웨덴 유럽의회 선거 결과

정당	2019선거 지지율 (총20석) 투표율 54.65%	2014선거 지지율 (총20석) 투표율 51.07%
사회민주당	23.6% (5)	24.19% (5)
온건당(Moderate)	16.8 (4)	13.65 (3)
스웨덴민주당(SD)	15.4 (3)	9.67 (2)
녹색당	11.4 (2)	6.49 (1)
중앙당	10.8 (2)	15.41 (4)
기독교민주당	8.7 (2)	5.93 (1)
좌파당	6.7 (1)	6.30 (1)
자유당	4.1 (1)	9.91 (2)
페미니스트당	0.8 (0)	5.49 (1)

출처: <https://www.election-results.eu/>

<표 4> 핀란드 유럽의회 선거 결과

정당	2019선거 지지율 (총13석) 투표율 40.7%	2014선거 지지율 (총13석) 투표율 39.1%
국민연합당	20.8% (3)	22.6% (3)
녹색당	16.0 (2)	9.3 (1)
사회민주당	14.6 (2)	12.3 (2)
핀란드인당	13.8 (2)	12.9 (2)
중앙당	13.5 (2)	19.7 (3)
좌파연맹	6.9 (1)	9.3 (1)
스웨덴인당	6.3 (1)	6.8 (1)

출처: <https://www.election-results.eu/>

5. 결론 - 노르딕 정체성과 이중적·실용적 통합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노르딕 국민들은 EU와 노르딕 협력·통합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성격은 무엇인가. ‘EU통합강화노르딕협력강화’라는 실용적 차원에서의 EU에 대한 높은 지지와 노르딕 통합의 이중적 통합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즉, 현재 노르딕 국가들과 시민들의 태도의 특징은 노르딕 협력·통합에 대한 강한 지지와 EU 잔류 선호라는 이중적 인식이다. 이는 그동안 노르딕 지역의 실용적 통합과 EU의 초국가적 통합이라는 이중적 통합을 수용하면서 이를 개별 국가와 지역적 발전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해 온 점을 보여준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EU의 시장통합에 따른 개방경제의 발전과 경쟁력, 국내적으로 사회적 평등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발전은 역사적으로 민간 대기업 중심의 시장 주도 수출중심 성장을 기반으로 해왔기에 스웨덴은 유럽통합,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EU의 경쟁적 통합양식에 잘 적응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Kokko, 2010). 덴마크도 역사적으로 중소기업에 기반한 개방된 수출 중심 경제를 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유럽의 시장통합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는 비회원국이지만 유럽 단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 노르딕 국가들 중 유일한 유로존 국가로 역사적으로 다른 발전경로를 거쳐 온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후 ‘따라잡기(catching-up)’ 전략으로 국가주도의 개입주의적 경제계획과 산업정책, 공기업 중심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Jäntti and Vartiainen, 2009). 따라서 핀란드는 상대적으로 민간부문과 시장이 약한 환경에서 시장통합에 참여했고, 더구나 국가의 경제정책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는 유로 단일통화 또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핀란드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온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한편, 노르딕 국가들은 지역 차원의 협력과 정체성을 중시해왔다. 역사적으로 헤게모니 국가였던 스웨덴-덴마크간의 전쟁과 경쟁관계, 지역 내 식민주의의 유산과 역사적 갈등, 핀란드 내전과 2차 세계대전을 둘러싼 지역 내 긴장과 이해관계 등 노르딕 지역은 20세기 전반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오늘날 노르딕 지역협력과 정체성은 과거부터 지속되어온 오랜 공

동안보의 관습, 경제통합, 중립·평화주의, 민주주의 가치의 공유 및 심화 등 ‘제도화된 우호관계’를 통한 상호이해와 공동번영에 기반하고 있다. 부정적인 역사적 기억을 갖고 있는 노르웨이와 ‘핀란드화’의 핀란드는 협력에 소극적이었지만 오랜 공통의 경험과 관습, 민주적 규범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노르딕 협력은 각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스웨덴과 덴마크는 지속적으로 긴밀한 노르딕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왔다. 외부세계에 지역의 단합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합의하면서 북유럽협의회가 제도적으로 교류와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정체성과 지역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했다. 시민사회단체간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 또한 노르딕 정체성과 노르딕 공동체의 중요한 한 구성요소가 되었다.

EU와 노르딕은 서로가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또는 배타적 위계적 관계로서가 아니라, 대등하고 실용적이며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시장 중심의 초국가적 유럽통합과 지역적 연대의 노르딕 통합 모두 각각의 이익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실용적 이익과 규범적 가치 모두를 일정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만 모든 노르딕 국가들이 같은 수준으로 적응하고 활용할 수는 없지만 노르딕 정체성은 최소한의 공동의 번영과 우호관계를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노르딕의 실용적 통합은 지속, 심화될 것이다.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민주적 규범, 오랜 노르딕 ‘평화’ 브랜드, 활발한 시민사회 및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은 이미 ‘노르딕’이라는 정체성 또는 공동체적 관습을 만들었다. 이에 더해 경제적 협력과 통합은 번영과 풍요를 이끌어왔으며, 최근 새로운 기술 및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 공동의 연구·혁신(R&I, Research & Innovation) 노력은 노르딕 공동체의 실재라 할 것이다.²⁵⁾

25) 북유럽협의회 홈페이지에서 교육, 문화예술, R&I,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orden.org/en/nordic-council>

자료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rden.org/en/publications> 참고

<https://www.norden.org/en/publication/annual-report-2018-nordic-e-i-nfrastructure-collaboration>

유로존 회원국으로 EU와 제도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통합되어있는 핀란드인들은 유럽통합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유로존 위기를 막지 못한 EU 정치인들과 비민주적인 재정 지원 등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크다. 핀란드인들에게는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가 존중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노르딕 정체성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핀란드는 민주적 규범은 물론 EU 규칙과 규제를 지켜왔지만 현실의 EU는 이들에게 오히려 유로존 위기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지워왔다. EU에 비판적이고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정당인 핀란드인당의 부상은 바로 그 결과라 할 것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브렉시트 투표 전까지 EU 내에서 영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다. EU의 유럽정책에 대한 유럽이사회(EU Council)와 유럽의회의 의결에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가 영국과 가장 유사한 투표행위를 해왔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모든 투표에서 영국과 89%의 싱크로율(synchronization)을 보였고, 네덜란드는 88.5%, 덴마크는 88%였다.²⁶⁾ 이는 스웨덴과 덴마크가 영국에 버금가는 소극적인 통합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웨덴과 덴마크인들은 유럽연합(EU) 보다 ‘노르딕연합(Nordic Union)’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²⁷⁾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중시하지만 중소기업인 이들은 유럽통합의 이점을 잘 알기에 잔류 여론도 높아 이중적·실용적 통합의 성격을 보여준다.²⁸⁾

1993년 EU 출범 후 EU 집행위원회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개혁프로그램을

26) 유럽 싱크탱크 VoteWatch Europe의 조사 분석 보고서 Hix, Simon, Hagemann, Sara and Frantescu, Doru (2016) *Would Brexit matter? The UK's voting record in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VoteWatch Europe, Brussels, Belgium.

<https://www.thelocal.se/20160420/sweden-and-denmark-revealed-as-uks-closest-allies-in-eu-votes>에서 재인용

27) <https://www.thelocal.se/20180727/almost-half-of-swedes-and-danes-would-prefer-nordic-union-to-eu-poll>

28) 스웨덴 총선(2018년 9월) 전 실시된 유력 여론조사(Gothenburg 대학 SOM Institute)에 의하면 53%가 스웨덴의 EU 회원국 지위를 찬성한 반면 반대는 18%로 나타났다. 2016년 같은 조사에서는 23%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덴마크의 유럽의회 선거결과를 보면 EU에 비판적인 극우정당 덴마크국민당의 지지율은 크게 폭락했다. 그만큼 EU 반대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벤치마킹했고, 리스본 조약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전략도 노르딕 국가들을 참고해 왔다. 노르딕 지역은 성공적인 금융위기 극복, 복지개혁, 노동시장개혁 등 리스본 전략인 '유럽화'²⁹⁾에 가장 성공한 지역이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브렉시트의 영국과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EU의 정책과 전략에 가장 성공적인 나라라는 점에서 이중적 통합과 이중적 정체성의 중심이라 할 것이다.

29) '리스본 전략 2000-2010', 'European 2020 Strategy'이 그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익(2018). 『2017~2018년 4월 유럽연합 국가별 총선결과: 우파강세 및 포
플리즘 확산, 그리고 유럽연합의 미래』 민주연구원 2018.4.
- 구춘권(2015). “그리스 채무드라마와 유로위기: 유로위기의 구조적 배경과
유럽연합의 위기 대응 변화” 『한국과 국제정치』 31권 4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김남국(2011). “유럽연합은 와해될 것인가 : 「장 모네 회고록」, 박제훈·옥
우석 역 [외] <서평>” 『아시아 리뷰』 1권, 2호 서울대학교 아시아연
구소.
- 김미경(2018). “브렉시트(Brexit)와 유럽통합 이론: 통합 과정의 가역성
(reversibility)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11권, 3호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 김인춘(2016a). “스웨덴 식민주의와 스웨덴-노르웨이 연합(1814-1905): 연합
해체 후 탈민족주의의 노르딕 공동체와 평화” 『서양사연구』 제54
집 한국서양사연구회.
- . (2016b).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배경, 맥락, 의의” 『스칸
디나비아 연구』 제18호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 김인춘·석주희(2017). “민주평화주의와 지역평화의 역사적·지정학적 형성: 노
르딕 지역과 동북아 지역의 비교” 『문화와 정치』 제4권 제4호 한
양대학교 평화연구소.
- 김학노(2018). 『남과 북의 서로 주체적 통합』 사회평론아카데미.
- 박이도(2008). “유럽통합의 길 - 확대와 심화” 『독일어문학』 41집 16(2),
289-311.
- 배병인(2018). “유럽 민주주의의 역진(逆進)?: 유럽통합의 삼각 딜레마
(trilemma)와 민주주의의 퇴조 경향” 『유럽연구』 36권 1호 한국유럽
학회.
- 서현수(2018). “핀란드 중립 평화 외교정책의 형성과 진화: 대외 환경과 정책
결정 시스템의 변화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22호 한

국스칸디나비아학회.

- 이옥연(2019). “영국의 탈(脫)유럽연합 투표: 유럽 지역통합과 국가 체제통합 간 양자택일?” 『국제지역연구』 vol.23, no.1,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신광영(2017). “유럽화와 스웨덴 노사갈등: 라발사례를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연구』 제 19호, 한국 스칸디나비아 학회.
- 홍태영(2018). “주권자(sov^{er}ign)의 귀환과 민주주의적 정치? - 포퓰리즘과 근대정치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아세아연구』 172호, 61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Arter, David. (2006). *Democracy in Scandinavia: Consensual, Majoritarian or Mixed?*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Archer, Clive and Pertti Joenniemi. (2017). *The Nordic Peace* Routledge.
- Aunesluoma, Juhana and Johanna Rainio-Niemi. (2016). “Neutrality as Identity? - Finland’s Quest for Security in the Cold War”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18, No. 4, Fall 2016, pp. 51-78.
(https://helda.helsinki.fi/bitstream/handle/10138/232331/Neutrality_as_Identity.pdf?sequence=1)
- Bache, Ian and Stephen George. (2006). *Politics in the European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 Bergmann, Eirikur. (2016). *Nordic Nationalism and Right-Wing Populist Politics: Imperial Relationships and National Sentiments* Palgrave.
- Bieler, Andreas. (2002). *Globalisation and Enlargement of the European Union: Austrian and Swedish Social Forces in the Struggle over Membership* Routledge.
- Bjørklund, Tor. (1997). “Old and New Patterns: The 'No' Majority in the 1972 and 1994 EC/EU Referendums in Norway” *Acta Sociologica* Vol.40 Issue 2.
- Bulmer, Simon and Christian Lequesne. (2013).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New European Union Series) 2nd Edition Oxford

- University Press.
- Bunce, Valerie, Michael McFaul and Kathryn Stoner-Weiss (eds.). (2009).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in the Postcommunist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poraso, J. A., M. Green Cowles and T. Risse (eds.). (2001). *Europeanization and Domestic Chang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Cowles, Maria Green and Michael Smith (eds.). (2001). *The State of the European Union - Risks, Reform, Resistance, and Revival* Oxford University Press.
- Damgaard, Erik and Torbjorn Bergman. 2000. *Delegation and Accountability in European Integration: The Nordic Parliamentary Democracies and the European Union*.
- Dimitrakopoulos, Dionyssis G.(ed.). (2010). *Social Democracy and European Integration: The politics of preference formation* Routledge.
- Egeberg, M., and Trondal, J.. (1999). “Differentiated Integration in Europe: The Case of EEA Country, Norway“,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7:133-142.
- Egeberg, Morten. (2003). “The Nordic Countries and the EU: How European Integration Integrates and Disintegrates States Domestically“ ARENA, University of Oslo.
(https://www.sv.uio.no/arena/english/research/publications/arena-working-papers/2001-2010/2003/wp03_11.pdf)
- Ekengren, M., and B. Sundelius. (1998). “Sweden: The State Joins the European Union“, in Hanf and Soetendorp (1998).
- Filimonova, I. “Nordic Identity and European Identity: Conflict or Coexistence? The Case of Sweden”.
- Geyer, Martin H., Johannes Paulmann. (2001). *The Mechanics of Internationalism: Culture, Society, and Politics from the 1840s to the First World War* OUP/German Historical Institute, London.

- Greenwood, Justin and Mark Aspinwall. (1998). *Collective Ac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ests and the New Politics of Associability* Routledge.
- Grøn, Caroline Howard, Peter Nedergaard and Anders Wivel (eds.). (2015). *The Nordic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 Still the other European community?* Routledge.
- Grøn, Caroline Howard, Peter Nedergaard and Anders Wivel (eds.). (2015). “Still the ‘other’ European Community? The Nordic countries and the European Union” in Caroline Howard Grøn, Peter Nedergaard and Anders Wivel 2015.
- Hanf, K. and B. Soetendorp (eds.). (1998). *Adapting to European Integration – Small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London: Longman.
- Hansen, Lene and Ole Waever(eds.). (2003). *European Integration and National Identity: The Challenge of the Nordic States* Routledge.
- Hegeland, H., and C. Neuhold. (2002). “Parliamentary Participation in EU Affairs in Austria, Finland and Sweden: Newcomers with Different Approaches“, European Integration online Papers (EioP), 6: (<http://eiop.or.at/eiop/texte/2002-010a.htm>).
- Jacobsson, B., P. Læg Reid, O.K. Pedersen. (2001). “Divergent Roads to Europe”, in K. Ståhlberg (ed.), *The Nordic Countries and Europe II*. Social Sciences Copenhagen: Nordic Council of Ministers. Nord 2001:23.
- Jenssen, A.T., P. Pesonen, and M. Gilljam(eds.). (1998). *To Join or not to Join: Three Nordic Referendums on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Oslo: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 Johansson, Karl Magnus and Göran von Sydow. (2010). “Swedish social democracy and European integration: Enduring divisions” in Dimitrakopoulos 2010.
- Johansson, Karl Magnus et.al.. (2012). “The Domestic Politics of European Union Presidencies: The Case of Sweden” *Government and Opposition*

47(02).

- Jäntti, M., and J. Vartiainen. (2009). "The Finish Developmental State and its Growth Regime", Research Paper 2009/35. Helsinki: UNU-WIDER.
- Kassim, H., B.G. Peters, V. Wright(eds.). (2002). *The National Co-ordination of EU Policy. The Domestic Leve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okko, A.. (2010). "The Swedish Model", Working Paper 2010/88. Helsinki: UNUWIDER.
- Krekó, Péter and Zsolt Enyedi. (2018). "Explaining Eastern Europe: Orbán's Laboratory of Illiberalism" *Journal of Democracy* Volume 29, Issue 3.
- Levitsky, Steven and Daniel Ziblatt. (2018). *How Democracies Die* Crown.
- Lidström, Anders. 2018. "Subnational Sweden, the national state and the EU" *Journal of Regional & Federal Studies* July 2018.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13597566.2018.1500907>)
- Lutmar, Carmela and Benjamin Miller (eds.). (2016). *Regional Peacemaking and Conflict Management: A Comparative Approach* London: Routledge.
- Michalski, Anna. (2013). "Sweden: From Scepticism to Pragmatic Support" in Bulmer and Lequesne 2013.
- Miles, Lee. (2000). "Making Peace with the Union?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Party and European Integration" in *Globalization, Europeanization and the End of Scandinavian Social Democracy?*.
- (2001). "Sweden in the European Union: Changing Expectations?"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 (2015). "Bridging interdependency? Nordic 'yes, but . . .' - integration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in Grøn et. al. 2015.
- Moravcsik, A.. (1998). *The Choice for Europe. Social Purpose and State Power from Messina to Maastricht* London: UCL Press.
- Olesen, Thorsten B. (ed.). (2004). *The Cold War—and the Nordic Countries: Historiography at a Crossroads* Odense: University Press of Southern Denmark.

- Sidenius, N.C. (1998). “A Collective Action Problem? Danish Interest Associations and Euro Groups“ in Greenwood and Aspinwall 1998.
- Skoutaris, Nikos. (2019). *Territorial Pluralism in Europe: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in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European and National Constitutional Law Series) Hart Publishing.
- Snyder, Timothy. (2018). *The Road to Unfreedom: Russia, Europe, America* Tim Duggan Books.
- Stegmann McCallion, Malin and Alex Brianson. (2018). *Nordic States and European Integration: Awkward Partners in the North?* Palgrave.
- Strang, Johan. (2016). “Nordic Polit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Context, History and Outlook“.
(<https://www.asean-aemi.org/wp-content/uploads/2016/03/AEMI-Forum-November-2015-Strang-Feb2016.pdf>)
- Widfeldt, Anders. (2015). *Extreme Right Parties in Scandinavia* (Routledge Studies in Extremism and Democracy) Routledge.
- Stubb, A.C.-G. (1996). “A Categorization of Differentiated Integration,”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34: 283-295.
- Sverdrup, U.. (1998). “Norway: An Adaptive Non-Member”, in Hanf and Soetendorp 1998
- Turley, Steve. (2018). *The New Nationalism: How the Populist Right is Defeating Globalism and Awakening a New Political Order* Kindle Edition.
- Von Dosenrode, S.Z.. (1998). “Denmark: The Testing of a Hesitant Membership”, in Hanf and Soetendorp 1998.
- Mounk, Yascha. (2018). “The Undemocratic Dilemma,” *Journal of Democracy* 29, no. 2.
- Zielonka, J.. 2014. *Is the EU Doomed?* Cambridge: Polity Press.

<Abstract>

Nordic Countries' Participation in European Integration and Nordic Identity: 'Europeanization' and Dual Integration

Kim, Inchoon *

The attitudes of Nordic EU member states and their people are dual since they have strong support to Nordic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s well as EU remain. They embrace pragmatic and normative integration of the Nordic region and supra-national single-market integration of the EU and make full use of the opportunity for national and Nordic regional development. Though Sweden and Denmark have revealed as UK's closest allies in EU votes and concern with their own policies and strategies, Sweden and Denmark, as small states, also regard the EU as important for their interests and prosperity. The Nordic region has been successful in overcoming financial crises, welfare and labor market reforms, among others, and has been most successful in 'Europeanization' of Lisbon strategy. Sweden and Denmark are key countries that have accomplished their own goals and have contributed to the EU's goals and agenda with coexisting dual integration and dual identity.

Key Words : European Integration, EU, Nordic Identity, 'Nordic Bloc', 'Europeanization', Pragmatic Integration, Dual Integration

*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성명: 김인춘
소속: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E-mail: ickim95@yonsei.ac.kr

논문 접수일: 2019.5.29.
수정원고 접수일: 2019.6.24.

논문심사 완료일: 2019.6.22.
게재 확정일: 2019.6.24.

